

상주 추모공원 조성...상주시민 염원 사업

강영석 상주시장 추모공원 터 제공도 결정 담화문 전격발표 지역간 갈등 해소 상생협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밝혀

상주시가 상주공설추모공원 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26일 상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주공설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 터 제공도 결정을 시민에게 발표했다.

기자회견은 강 시장이 시민에게 알리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추모공원 터 제공도 결정을 하게 된 이유

와 향후 계획 등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시장은 "시정의 책임자로서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터 제공도 결정은 지역간 갈등으로 인한 추모공원 조성이 더 이상 지연되거나 표류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추모공원 조성은 상주시민 모두의 염원인 중요한 사업이다.

단순히 장사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공복지 증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라고 강조했다.

시는 2022년 합창을 나한리 일대를 추모공원 터로 선정했다.

하지만 인근 지역간 갈등으로 사전행정 절차인 지방재정투자심사가 2차에 걸쳐 승인되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4월 경북도에 공동장사시설 협의회 구성을 요청, 갈등을 해결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돼 사업추진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강 시장은 "지난 23일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합창 나한리 추모공원 부지를 재검토, 새로운 터 선정을 위한 제공도 심의 의결돼 건립추진위원회 의결사항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근 지역간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주와 인근 지자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형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려 했으나, 지역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점은 시정의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 상주-문경은 생활권을 같이 하고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므로 이번 일로 더 이상의 갈등이 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시는 2022년부터 사업비 257억원으로 상주시 합창을 나한리 산12-7 일대 9만 182㎡를 추모공원 터로 선정했다.

그동안 시는 자연장지와 봉안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인근 지역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26일 상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주공설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 터 제공도 결정을 시민에게 발표했다.

한편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상주시청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새로운 터 선정을 위한 제공도를 추진키로 심의의결했다. 이경호 기자



한마음 한뜻으로 '상주가 딱이루' 상주금요회가 상주시립도서관에서 관내 기관·단체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을 주제로 긴급현안 회의를 열고 유치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날 강영석 상주시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그간의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경과 △국방부가 요구한 (가상)무열 과학화 종합훈련장 현황과 후보지 위치 △향후 평가 진행 절차와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사진=상주시 제공)



오명관광역행사

단체장 일정



임중식 경북교육감은 27일 오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4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제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27일 오후 구청장실에서 열리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후원물품 기탁식에 참석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대구시, 道에 행정통합안 28일 수용하라 최후통첩...

최종 합의안 수용하지 않으면 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입장보내

관련기사 2·3면

대구시가 행정통합과 관련, 경북도에 최후통첩장을 보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쟁점 사안들이다.

시는 경북도가 28일까지(대구시가 제시한) 최종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경북도가 28일까지 합의할 경우 오는 30일(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무산시에는 장기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대구시의 최종 합의안은 통합이전

에 시·도간에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며 이에 대한 합의 없이 결정을 유보한 채 통합을 추진할 경우 통합 이후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통과 시 대구경북특별시의 전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 청사 등을 담은 합리적인 합의안을 (대구시가) 제시한 만큼 경북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28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지역의 성장과 쇠퇴의 기로에서 시도민들의 미래 먹거리, 생존, 삶의 질이 달린 중차대한 사항인 만큼 대구시가 제안한 합리·상식적 합의안을 경북도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서 지난 23일 통합자치단체의 청사 소재지 및 관할 범위, 지역 의견 수렴 방식, 시·군의 권한 축소 또는 확대, 소방본부 직제 등 그동안 경북도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한 최종안을 도에 전달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경실련 "중구의회 의원 국힘 윤리위에 신고"

중구의회 사태 국힘 태도 확인 적극적 대응 촉구...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26일 국회의원회 대구광역시당 윤리위원회에 중구의회 배태숙, 권경숙 구의원에 대한 윤리규칙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중구의회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를 확인하고 적극적

인 대응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배 구의원과 권 구의원에 대한 윤리규칙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구의원의 규칙 위반 사유는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7조(이해충돌금지), 제9조(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제4조(품위유지) 위반 등이다"며 "징계권의 판공적인 약용 등 국민의힘 소속 중구의회 의원들의 국민의힘 윤리규칙 위반에 대해서도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행정통합... 대구시-경북도 동상이몽 백지화되나?

김호진 道 기획조정실장, 시군 시도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대구시 주장 문제 지적, 일선 시군 권한강화 재정권 보장... 3대 통합원칙 지켜져야 합의 가능 못박아

행정통합을 놓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동상이몽이다.

자칫 행정통합이 백지화될까 우려스럽다는 말까지 나온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26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회견에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 통합 안합의가 어렵고 설진 실태에 모습이다.

경북도는 대구시의 행정통합 제시안은 불허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와 경북도의 특별법안 차이점과 경북도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도의 법안은 자치권 강화, 재정 자율성, 특별기관 이전 등에 중점을 두지만 대구시는 청사 위치와 관할 범위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권 대폭 강화에는 대구시와 합의가 이

뤄진 상태. 그러나 통합특별시와 시군 구 권한 모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경북도의 안과 달리 대구시는 특별시의 '직접 행정'을 강조하면서 시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있어 '시군구 자치권 확대'라는 경북도의 기본방향과 배치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시군구가 아닌 광역지자체 중심 행정을 강조하는 대구시의 안은 저출생과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의 병폐를 낳는 지역 내 중앙집권체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결국 "대구시 주장대로라면 시군 권한축소는 불가피하며 이는 지금의 시대정신인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균형발전엔 반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북도가 주장하는 통합모델은 시군 권한을 약화시키는 특·광역시 모델이 아니라, 시도가 합쳐 기존의 광역시보다 권한과 특례가 늘어나고 시군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제3의 형태의 광역지방정부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청사 문제와 관련, "대구시의 발표는 경북도와 사전협의가 없었고 시군, 시도민 의견수렴도 없었다. 대구시의 일방적인 대구청사 관할 확대, 경북 북부지역과 동부지역 청사 분할 주장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대구시의 동부청사 주장은 대구 중심 특·광역시 체제를 전제로 한 것이다. 통합은 시도를 합쳐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를 확대하고 경북을 분할해 3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김 실장은 "대구와 안동 현 청사체제를 유지해야 통합과 자율적 대응이 가능하다.



사진설명=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안에 따른 대구시의 일방적인 대구청사 관할 확대, 경북 북부지역과 동부지역 청사 분할 주장은 유감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진=경북도 제공)

청사는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으므로 일단 시도민이 수용가능도록 현 체제를 유지하고 통합 이후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소방 및 교육청 청사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지역 관리능력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이 2곳으로 나눠서 운영해야 한다. 1곳 설치하는 대구경북 2만㎡의 구역 관리가 곤란하고, 3곳 설치하는 행정통합으로 기대되는 효율성 향상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시도간 행정적, 절차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인 통합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 청사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워지면 제3자,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지속적인 통합 논의 이어가자"고 제언했다. 김성용 기자

대구시가 제안한 행정통합 합리·상식적인 합의안

대구시,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 경북도에 통보 특별법 대부분 합의... 경북 대승적 결단 촉구

대구시가 행정통합에 따른 최종합의안을 경북도에 제시했다.

대구·경북이 통합,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넘겨받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절실하다는게 이유다.

시는 지난 23일 경북도에 그간의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밝혔다.

홍 시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쟁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되는 것은 견고했던 대구·경북의 협력관계가 위태해질 수 있어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대구·경북 미래 위한 필수

현재 대구·경북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경제성장이 정체되며 일자리 및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경북 북부지역 일부 시·군에서는 심각한 인구감소로 병원, 약국, 시장 등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 사라지며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1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도는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전국 2위)이다.

최근 10년 성장률이 1.2%로 (17개 시·도중 하위 3위) 이러한 추세라면 20년 내 대구·경북 모두 지방소멸 고위험군에 진입한다.

때문에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절박한 현실이자 지역의 필수 생존전략이다.

대구·경북을 통합,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대폭 이양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한다.

대구·경북을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경제, 도시개발 등 분야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련한다.

□행정통합 특별조치법안 핵심 내용

첫째는 개발특례이다.

경기도 2배 수준의 한반도 최대 면적 도시라는 대구·경북의 강점을 활용한다.

특별법에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지·산지 전용허가 권한 이양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의 특례를 포함, 풍부한 산업 용지 확보이다.

투자특례는 외국인 투자기업, 대기업 등을 유치한다.

시는 △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투자진흥지구 △R&D포괄 보조금 등의 특례를 포함, 기업들이 투자할

대구·경북의 달라지는 위상

대구경북 산업·경제 여건의 변화

성장인프라·동력 확충 : 대구혁신 100 실감

대구경북신공항 2030년 개항

3.8배
미주-유럽 항공기
직항 노선 10주주

30%
글로벌 첨단
물류-이력 복합공항

신성장산업 핵심자원 확보

에너지 수자원
첨진 SMR(소형모듈원자로)
저탄소, 다목적용 등
충분한 저수역

특별법(안)에 따른 성장동력 강화 : 대구혁신 100+1

획기적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특례(245개)

- 부동산 특례
 - 규제프리존(글로벌미래특구)
 - 투자진흥지구
- 산업 특례
 -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이양
 - 44개 규제완화 인·허가 의제
- 도시 특례
 - 광역통합교부금
 - 지방임대소득세
- 산업 특례
 - 역사문화
 -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대구·경북 광역통합 시너지

- 산업 특례
 - 이차전지, AI 등 미래산업 테크놀로지
 - 대구·경북 바이오 의료헬스 조성
- 인력 특례
 - 대구·경북 지역대학 산·학·연 연계
 - 대구권 대학과 경북 산업 인력채용
- 연구 특례
 - R&D 포괄보조금으로 중점투자 제거
 - R&D 전담기관 신설, 연계 협력 강화
- 교통 특례
 - 광역교통망으로 단일 생활권 형성
 - 북부지역 등 관광벨트 조성

한반도 최대면적 도시

풍부한 산업용지, 수도권 대비 1/2수준의 저렴한 부지가격
성장인프라 + 규제완화특례 → 대대적 성장 가속 본격화

통합된 대구경북,

우리 시·도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인구가 늘어, 교통도 편리해집니다.
통합은 선택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필수입니다!

개발목표

면적 산업단지 30,533만평
* 경기도 신안면적 4배/통대구-경북 신안면적 5.9배
* 면적 경기도 2배/부지가격 1/2수준

투자유치 20년간 3,610조원
* 대구-경북 인산 8기 투자유치: 32조원
* 시·도 인산기 투자유치 기준, 1인당 투자금액 1억

부지 경쟁력 + 획기적 특례
20년간 대규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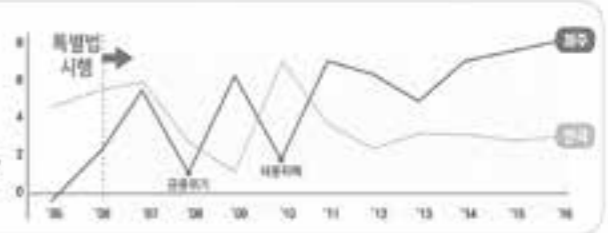
투자유치 특례 + 신공항·에너지
투자유치 가시적 성과 창출

기대효과

구분	2024년	2045년
인구 수	491만명	1,205만명 (2.4배↑)
GRDP	178.5조원(22년)	1,511.7조원 (8.4배↑)
연평균 성장률	1.41%	9.0% (6.3배↑)
취업자 수	269만명	773만명 (2.8배↑)
사업체 수	61만개	236만개 (3.8배↑)

특별법 통과 사례

제주특별법 통과 ('06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5% 고성장



수 있는 획기적인 환경을 만든다.

재정특례에 있어 대구·경북이 발전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연간 약 2조 원 이상 증가하도록 가칭 광역통합교부금 등 타 시·도 특별법에 없는 새로운 재정확보 특례를 포함,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여건을 완성한다.

지방 양도소득세, 법인세 15% 이양, 지방세 소비지수 가중치 상향, 지방 복권 등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대효과

대구·경북이 통합, 획기적인 특례·권한이 확보되면, TK 신공항·풍부한 에너지(원전,SMR)·수자원 등 성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가 활발해진다.

2045년 일자리는 773만개(현재 대비 504만개 증가, 2.8배↑), 인구는 1205만명(현재 대비 714만명 증가, 2.4배↑), GRDP는 1512조원(연평균 9% 성장, 8.4배↑), 사업체수는 236만개(현재 대비 175만개 증가, 3.8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이 현 추세대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2045년 대구경북특별시의 위상은,서울 대비 인구는 1.4배이다.

일자리는 1.5배, 사업체는 1.4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2년 서울의 0.37배 수준에 불과했으나, 2045년에는 서울의 1.3배 수준까지 늘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법 통과(2006년)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연평균 5%로 고성장했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제주도보다 더욱 강력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이 밀집한 경북 북부 등 낙후지역 또한 TK신공항과 연계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 기업과 청년이 몰려들고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역 경제가 성장, 튼튼해진 재정 수입과 늘어난 권한을 바탕으로 대형 병원과 문화·복지시설도 대폭 늘어난다.

이 뿐 아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의료, 교통, 교육, 문화·예술 등이 더욱 개선·발전돼 전체 대구경북특별시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대구시 최종 합의안 도출까지의 경과 및 배경

지난 6월 4일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 4자 회담을 통해 행정통합의 필요성, 기본원칙, 통합 로드맵에 합의했다.

시는 6월 18일 국장급 전담 조직인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출범했다.

지난달 4일 213개 조문으로 구성된 가칭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 초안을 마련, 경북도에 전달했다.

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못박았다.

시는 대구·경북 발전의 역사적 분기점이라는 인식하에 그간 실무협의 과정에서 경북도가 제시한 의견 중 필요한 내용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부청사, 시·군 사무 권한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 지역 경제성장을 위해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한 마음이 여전하다.

결국 지난 23일 경북도에 통합의 목적인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과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상식적 수준의 최종 합의안 제안했다. 조여은 기자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경북도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으로 기대...

행정통합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 지방소멸 위기 극복 최대 목표 통합해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20년 이내 경북 북부지역 소멸

그간의 쟁점에 대한 대구광역시 최종 합의안

▲ 의회 소재지

의회의 자율권을 존중,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 후 시행령을 반영한다. 대구시는 당초 통합 시의회 소재지를 대구에 두도록 법안에 포함했지만, 경북도는 포함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경북도 의견을 수용, 최종 합의안으로 의회 자율권을 존중하기 위해 의회 소재지는 법안에서 포함하지 않되,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 후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제안한다.

▲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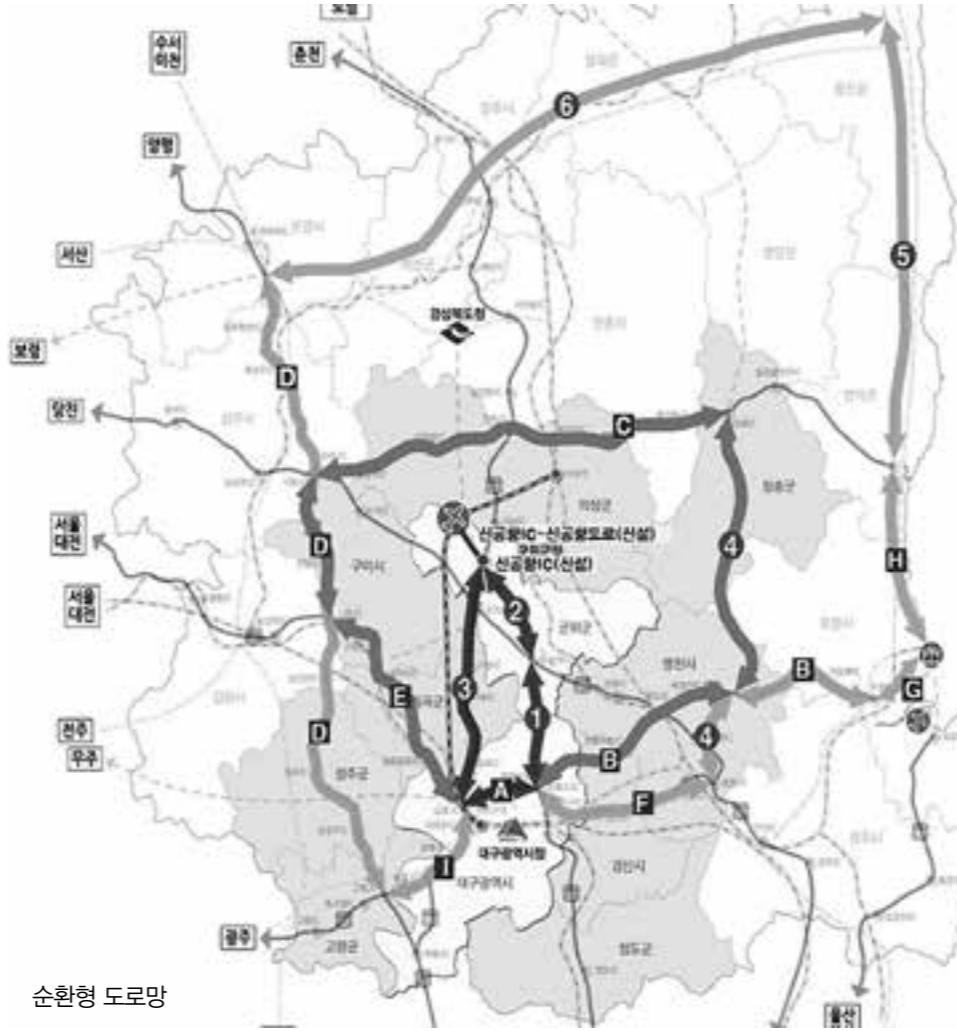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과 지난 6월 4차 회담 합의 내용에 따라 원칙대로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한다. 시는 애초 행정통합 의견 수렴 절차를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지난 4차 회담(6월 4일) 합의 내용에 따라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 제안. 경북도는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합칠 때 관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법상 주민투표까지 최소 3개월 가량의 기간이 필요하다. 중앙 부처 협의 및 법안 발의 등 후속 절차가 늦어져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불가능하다. 시는 최종 합의안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 및 지난 4차 회담(6월 4일) 합의 내용에 따라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원칙대로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하도록 제안한다.

▲ 관할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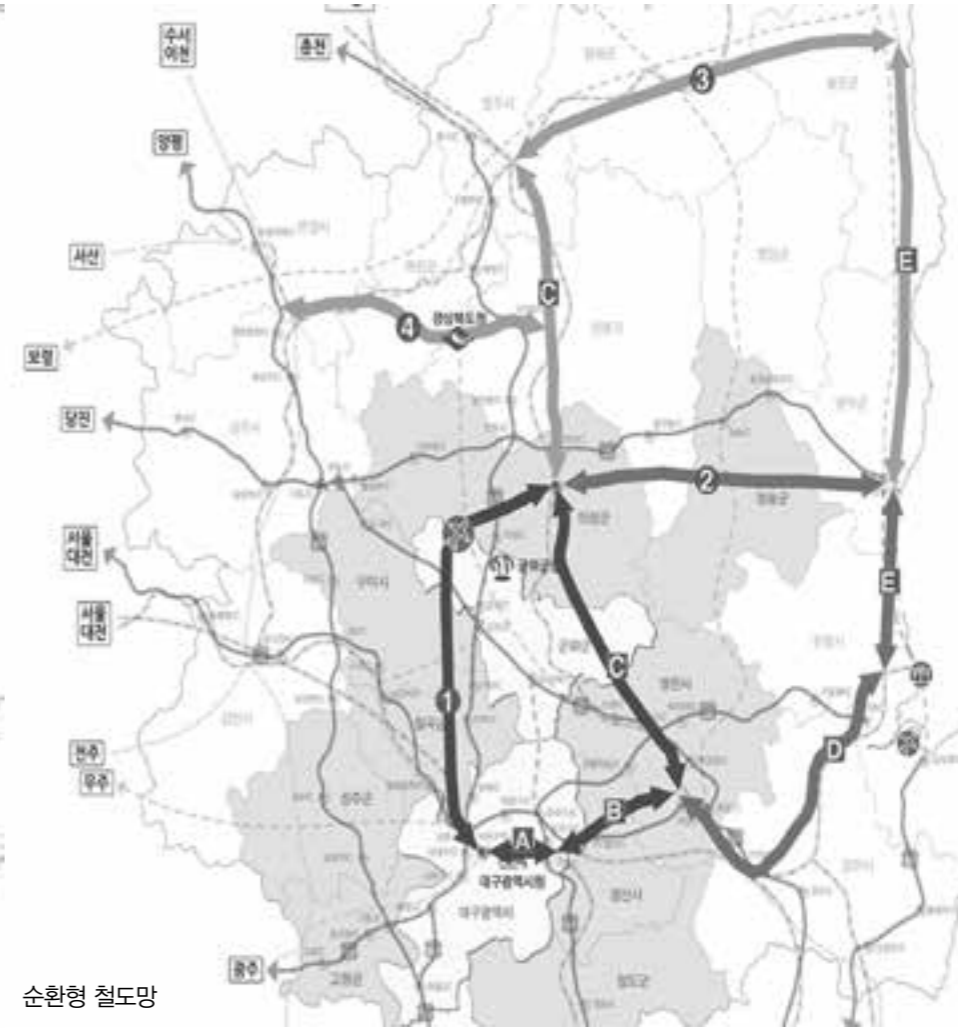
법안에서 삭제하고, 기능별 사무분장으로 시행령을 반영한다. 시는 애초 법안에 대구·경북·동부 청사별 관할구역을 명기하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관할구역을 법안에서 제외하고, 향후 조례로 규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경북도의 의견을 수용, 최종 합의안으로 △법안에서 관할구역은 제외 △현행 법체계에 따라 대구·경북·동부청사의 부시장 사무를 산업·지형적 특수성을 고려, 기능별로 분장 및 시행령에 반영한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는 부시장(부지사)이 3명을 초과하는 시·도의 경우 지역별(경기도) 또는 기능별(서울특별시)로 사무를 분장하도록 규정돼 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구청사와 경북·동부청사에 배치하는 실·국 수는 동일하게 배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시가 제안한 최종 합의안은 대구경북특별시가 빠르게 발전하기 위한 기본원칙이자, 현행 법체계와도 일치하는 상식·합리적 대안이다.

▲ 소방본부장

직급·정원 명기, 소방정감 근무지는 중앙이 결정 후 시행령을 반영한다. 시는 애초 대구소방본부에 소방정감을 두고, 경북소방본부와 동부소방본부에 소방감을 배치하도록 제안했으나, 경북도는 경북소방본부에 소방정감을 두고, 대구소방본부에 소방감을 배치하도록 제안한다. 시는 경북도 의견을 반영한다. 최종 합의안으로 법안에는 소방정감 1명, 소방감 2명으로 직급·정원만



순환형 도로망



순환형 철도망

명기한다. 소방정감 근무 위치는 행안부와 소방청이 소방수요의 정밀 분석 등을 거친 후 결정,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제안한다.

▲ 시·군 사무권한

특별시 체계로 조정, 조례로 위임, 권한축소를 방지한다. 대구·경북의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지위는 유지한다. 대구경북특별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간의 사무 권한은 서울특별시와 준해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통합자치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제안한다. 경북도도 명칭은 수용했으나 시·군 사무권한을 현행 특·광역시 체계로 조정하지 않고 시·군에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는 대구·경북 전체의 경제·산업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존 시·군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광역 교통망 구축, 복합 문화·복지시설 등을 특별시장이 종합적으로 계획·집행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준수한다. 시·군 사무권한을 현행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되 경북도 의견을 반영한다. 특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무를 제외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특별시장이 조례로 시·군에 위임, 권한 축소를 방지하는 내용을 최종 합의안으로 제안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356개 시·군 사무 중 7%에 불과한 25개 사무 권한만 특별시로 이관된다. 이관 사무는 개별법 등에 따라 모두 조례로 시·군에 위임이 가능하다.

▲ 군위군 편입 시사례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등 일부 권한을 위임한다. 특별법에 따라서 확대되는 특별시장의 권한 중 △유아장(체험형 관광 유치장) 지정 권한 △산림욕장 승인 권한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 권한 등 시·군이 잘할 수 있는 사무는 더욱 위임한다. 시·군 권한의 축소 방지를 넘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달성군은 1995년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됐다. 이후 산업단지는 1994년 0.1만평에서 2024년 14.9만평으로 127배 증가했다. 인구는 올 7월 현재 25만 9000명으로 전국 '군

단위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지역이 획기적으로 성장했다. 2024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1위를 차지한 울산 울주군 32.53% 다음으로 달성군이다. 달성군의 재정자립도는 29.99%다.

▲ 동부청사

법안에 명기하고, 부시장 조직으로 격상한다. 시는 애초 법안에 '동부청사를 명기하도록 제안했다. 그간 경북도는 법안에 청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동부청사'는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대구·경북이 경기도 면적의 2배이자 한반도 최대 면적 도시로서 면적만 고려 시 4개 청사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대구·경북은 권역별 산업·지형적 특수성이 뚜렷하다. 서·남부권(도시), 북부권(산림), 동부권(해양)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3개의 청사가 필요하다. 서·남부권(첨단산업·의료·문화), 북부권(산림·농업·비이코), 동부권(해양·항만·에너지)이다. 경기도 역시 넓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경기도청(수원)과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 2개 청사를 두고, 각각 행정1·2부지사를 배치했다. 이미 경북도가 1.1만평 부지에 약 310억 원을 들여 동부청사를 올려 7월 준공 운영중이다. 동부지역의 신공공과 연계되는 항만, 원자력·수소 에너지 등은 대구·경북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 요소이다. 현재 동부청사의 환동해지역본부장(2급)을 부시장급으로 격상, 그 기능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감안, 법안에 동부청사명기를 제안한다.

▲ 부시장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 4명을 두고, 글로벌 도시로의 경쟁력 확보 및 대구·경북 균형발전을 위해 청사별로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시는 애초 부시장 4명과, 그중 2명의 차관급 국가공무원을 제안했다. 경북도는 2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자치권 강화라는 통합의 명분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경북은 서울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가와 긴밀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통합 이후 대대적인 개발을

통한 압축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중앙부처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차관급 국가공무원이 필요하다. 2024년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 74%, 대구 44%, 경북 25%이다. 시는 통합의 목표가 서울 중심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 '글로벌 도시'로의 경쟁력을 확보, 인구소멸 위기지역을 '균형발전' 시켜 한반도 제2도시로 약을 분명히 하고, 부시장 배치를 최종 합의안으로 제안한다. 대구·경북을 글로벌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구가 많고 공항과 고속철도 등 대도시권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대구청사에 행정1부시장(차관급),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국가직 1급)을 배치한다. 경기도는 행정1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등은 대도시권 인구를 늘리고, 행정2부지사와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이 밀집한 북부지역 등을 균형발전시키기 위해 경북청사에 행정2부시장(지방직), 균형발전실장(지방직 1급) 배치, 동부청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3부시장(차관급)을 배치한다.

▲ 향후 계획

대구시 최종 합의안은, 통합 이전에 시·도 간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다. 위 사항들에 대해 합의 없이 결정은 유보한 채 통합을 추진할 경우, 통합 이후 더더군다나 갈등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통과 시 대구경북특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청사 등을 담은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한다. 경북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간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의 성장과 쇠퇴의 기로에서 시·도민들의 미래 먹거리, 생존, 삶의 질이 달린 중차대한 사항이다. 대구시가 제안한 합리·상식적인 합의안을 경북도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대구시가 내놓은 행정통합에 따른 최종합의안을 28일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협의 및 국회 입법절차 등의 후속 절차 진행이 늦어진다. 시는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려워 행정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론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여은 기자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감감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시일보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경주시 황성동 새마을협, 집수리 봉사 활동

경주시 황성동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지역 내 노후된 싱크대와 도배장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방문해 '사람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집수리 봉사활동 대상 가구는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복지, 보건, 주거, 일상생활 유지 등 다양한 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이다.

안원숙 새마을부녀회 회장은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회원들이 가진 재능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황성동 새마을협의회는 황성동맞춤형복지팀과 업무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속적인 재능기부로 지역의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주시장, 주부산 중국총영사관과 APEC 협력 논의

총영사 권한대행과 교류 논의 중 8개시 자매우호도시 결연 속소·회의장 시찰 차 경주 찾아

주낙영 경주시장은 26일 오전 시장실에서 우역비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총영사 권한대행을 만나 교류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역비 권한대행은 다롄외국어대 한국어과를 졸업하고, 2003년 중국 외교부에 입직한 인물로, 주한 중국대사관, 중국 외교부 예비사(의전국)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부총영사로 부임했다.

경주시는 앞서 중국 산시성 시안시와 1994년 11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초저우, 양저우, 자오궈, 이창, 첩더, 난핑 등 중국 8개 도시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내년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에서 주부산 총영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러한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는 중국 8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결연을 맺고 교류를 왕성히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경주와 중



국 간의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역비 권한대행은 "중국도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코로나 정체를 극복하고 APEC

의 중요한 의제 및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

했다. 우역비 총영사 권한대행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장이 될 HICO를 포함해 숙박 시설 등을 둘러본 후 부산으로 돌아갔다.

경주시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2024 APEC 참가예정국인 중국과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내년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건강나라, 어르신 입욕권 천여장 전달

산내면행정복지센터 전달

건강나라는 지난 23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산내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입욕권 1191매(약1071만 9000원 상당)를 산내면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건천읍에 위치한 사우나·찜질방인 건강나라는 2009년부터 15년째 매년 5월 어버이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무료 입욕권을 제공해 지역 어

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며 효(孝)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창훈 대표는 "추석을 맞아 어르신들이 저희 건강나라에서 무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진우 산내면장은 "1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 건강나라 대표의 아름다운 기부 습관에 존경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장, 안전한 추석맛이 종합대책 추진 주문

APEC 정상회의 시민참여 방안 주문

주낙영 경주시장이 26일 8월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 안전한 추석맛이 종합대책 추진과 APEC 정상회의 시민참여제고 방안을 주문했다.

먼저 주 시장은 추석을 맞아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로 및 환경 정비, 의료기관 및 종합 상황반 운영 등을 중점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읍면동 자생단체와 환경정화 활동 시 시간선도로, 인터체인지, 다중 집합건물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에서 행사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추석 연휴기간 배출되는 쓰레기를 적재적소에 수거하고 명절 쓰레기 줄이기 홍보,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계도·단속 등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APEC 정상회의 행사 시 시민들을 동참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주 시장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APEC 행사지원 TF팀을 별도로 만들어 APEC 시민대학 개설 추진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전했다.

여기에 "식당 주방 및 화장실 환경개선, 외국어 표기 간판과 메뉴얼 준비, 앞치마 및 명찰 패용을 비롯한 위생교육 등으로 글로벌 관광도시 구축에 걸맞은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달라" 언급했다.

석굴암 배후 산사태 피해방지 응급조치 완료



예방시설물 긴급정비 공사 완료 향후 주변 위험지 정밀지질조사

경주시가 태풍 내습 전 석굴암 배후 산사태 피해 예방시설물 긴급정비 공사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국가유산청 긴급예산(국비) 7억 확보해 먼저 지난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토석류 방지막 6곳 설치 공사를 추진했다.

이어 8월 계획은 등 긴급 시설물도 추가 설치했다.

이는 지난 3월 토함산지구 석굴암 인근 산사태 피해 발견 후 국가유산청, 관계전문가 등이 합동 조사를 거쳐 향후 피해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다.

특히 시는 오는 가을 태풍, 집중호우를 대비한 조속한 정비 공사를 위해 현장 변경, 계약 등의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완료했다.

또 시설물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주시산립조합에 시공감리 용역을 의뢰해 진행했다.

향후 시는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다음달부터 내년도 3월까지 석굴암 주변 위험지 정밀지질조사와 산사태 피해 복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현장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역에는 국가유산청 긴급예산(국비) 1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한편 석굴암 석굴은 신라 불교예술의 전성기에 이룩된 최고 걸작으로 국보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으며, 1995년 12월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석굴암은 종교성과 예술성에서 우리 조상이 남긴 가장 탁월한 작품이자 빛나는 유산이다"라며 "이번 긴급 정비 공사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되는 용역을 통해 항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도심 활성화" 불금예찬 야시장 6주간 문 연다

KB국민은행 경주점 일원 이벤트 주변 공방들 연계 플라마켓 예정

경주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봄·가을 시즌제로 개장했던 '불금예찬 야시장'이 다시 문을 연다.

경주시는 23일부터 6주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KB국민은행 경주점 동편 골목 일원에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아주 특별한 야시장 '불금예찬 야시장'을 개장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장 기간 금리단지 내 맛집들이 참가하는 먹거리 마대와 주변 공방들과 연계한 플라마켓 등

이 열린다. 특히 올해 '불금예찬 야시장'은 먹거리 맛과 소핑의 흥을 한층 더 높이는 소소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먼저 개장 첫날인 23일에는 황리단길에서 출발해 중심상권을 순회하는 퍼레이드 행사가 열렸고, 경품이 걸려 있는 퀴즈쇼 진행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셀러를 이겨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상인들과 방문객들 간의 경쟁 이벤트로 야시장의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었다.

또 오는 30일과 31일에는 '불금예찬 나이트' 주제 북고 컨셉의 이벤트를 개최해 키즈페어

in 불금예찬, 추석한마당 등 매주 다른 컨셉으로 방문객들의 입맛과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작정이다.

이어 마지막주인 다음달 27일 금요일부터는 일요일까지 일정을 늘려 3일간 불금예찬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개장 장소 또한 봉황대까지로 확장해 더 많은 방문객을 맞을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불금예찬 야시장이 무더위로 지친 경주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활력 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활력이 넘치는 불금예찬 야시장 분위기를 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시민들에 큰 호응

지역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34000여명 고혈압 등 환자 등록

경주시가 심뇌혈관질환의 선형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소내 운영 중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센터는 지난 12년 동안 주민의 치료율 향상과 자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까지 34,000여명의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등록·관리 중이며 1:1 맞춤형 상담과 리콜·리마인드 서비스(진

료일정안내) 등을 제공하여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독려하고 있다.

또 관내 의료기관, 사업장, 경로당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질한 및 합병증 예방 교육,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경주시는 노인인구가 26.1%에 달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 자체 재정을 추가로 편성하고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80억원(기금·도비 48억)의 예산을 들여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일



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진료 중인 의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지난 2012년 1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전국에 19개소만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구미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의성

구미~군위 고속도로... 중서부광역 발전 열 것

도로 건설 사업 예타 선정
추정 사업비 약 1조 4천억원
신공항 10km 인접 산단 보유

구미시는 기획재정부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 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대구-경북 신공항이전에 따른 물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구미에서 중앙고속도로(군위군 효령면)까지 21.2km, 4차로의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추정 사업비는 약 1조 4천965억 원에 달한다.

그간 김장호 구미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통령실, 국회, 정부세종청사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하며 항공물류 수송의 필요성과 고속도로 및 IC(2개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10월 사전타당성조사 착수를 밝히며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다.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는 1970년 구미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54년 만에 도심을 동서로 관통하는 최초의 고속도로로, 개통되면 구미는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등 기존 교통망과 신공항이 연결돼 경북 중서부권의 중요한 교통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노선의 대부분이 구미를 통과하고 관내에 IC 2개소가 설치됨에 따라, 도심의 상습 정체가 해소되고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구미 지역 어디서든 통합신공항까지의 접근 시간이 20분 이내로 단축된다.

고속도로 신설은 구미 국가산단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시는 통합신공항과 불과 10km에 인접한 국가산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경상북도 항공 수출액의

93%, 수출입 물동량의 48%를 차지하는 항공수출의 도시로 자리잡고 있다.

IT 전자, 광학 등 경박단소형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신공항 개항과 고속도로 신설은 기존 산단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방산혁신클러스터, 반도체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대형 국책과제 선정으로 구미 국가산단의 제도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노후산단 재생

사업과 현재 분양 중인 제5국가산업단지와의 연계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중서부권 광역 발전의 시대를 열 것이다"며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구미가 공학 경제권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명주 기자



영천, 파숨가게 34호점 지정

동부동 신규 '파숨가게' 2개소 현관 전달식이 지난 22일 34호점 말자갈국수와 35호점 어여와포차(대표 김향춘)에서 진행됐다.

신규 파숨가게 2곳은 망정동 소재 동부동 맞집으로 유명하며,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으로 매일 파숨 꾸러미에 식료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파숨가게 사업은 지역 내 생활 밀착형 가게에서 무상이용 쿠폰을 발행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지급하는 나눔 실천 사업으로 동부동에는 현재 33개의 파숨가게가 있으며, 이번에 2개소가 추가돼 총 35개소가 됐다. 최은하 기자



성주용암면 새마을문고 졸업식

성주군 용암면은 지난 23일 덕평리(사부골) 경로당에서 새마을문고 회원 및 수강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마을학교 졸업앨범을 촬영했다.

우리마을학교는 새마을문고 성주군지부 주관하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래, 한글·음악·미술교육 등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간 운영되며 10월에 수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늘 졸업앨범을 촬영한 한 어르신은 "이것 저것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니 너무 기분이 좋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재엽 용암파출소장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이스 피싱 교육을 실시하였다.

박지소 용암면 새마을문고회장은 " 그동안 열정적으로 배우고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가슴이 뿌듯하고, 학사모를 쓰고 졸업가운을 입고 기쁘게 촬영하시는 어르신들을 나도 같이 즐거워진다고" 말했다.

성주군수는 "100세 시대 노년은 끝이 아닌 또다른 시작이며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르신들이 보고, 듣고, 배워서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도재훈 기자

고령군 임대형스마트팜서 방울토마토 첫 출하

청년농업인들 6명 입차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에 위치한 임대형스마트팜에서 26일 방울토마토 첫 출하 소식을 전해왔다.

현재 고령군 임대형스마트팜은 공고를 통해 최종 선발된 6명의 청년농업인들이 올해 7월부터 시설을 임차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중 두 농가에서 토마토 첫 출하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그들은 "올여름 무더운 날씨에 첫 정식을 일찍 시작한 탓에 관리가 여느 때보다 힘들었지만, 최첨단 스마트시설이라 보다 정밀한



환경관리가 가능해 품질 좋은 토마토를 수확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작물이 잘 자라 주어 기쁘고, 이렇게 고령군에서 첫 토마토를 출하하게 돼 영광이다"

라고 말했다. 고령군은 올 한해 기록적인 폭염과 이상기후로 힘든 여름을 보냈을 청년농업인들에게 노고에 격려하며, "정성들여 재배한 토마토가 시장에 좋은 가격으로 출하되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토마토 첫 출하는 고령군 임대형스마트팜 임차 청년농업인 양쪽 모두의 성공적인 첫 걸음을 의미하며, 고령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첨단 스마트팜 보급 확산에 힘쓰고, 젊은 농업 인재의 지역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도모를 적극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배영백 기자

의성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규모 확대

60억원 추가 총 180억원 규모
최대 3억원 융자신청 가능해

의성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융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고물가의 여파로 기존 융자 한도가 예년보다 더욱 빠르게 소진되었다. 따라서 군은 추석 명절에 맞추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 규모를 60억 원 추가하여 18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최대 3

억원(우대업체 5억 원)의 융자신청이 가능하고 그 대출금에 대해 1년간 3.5%의 이자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매년 많은 기업들이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미래산업과(054-830-661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 운전자금 확대에 관해 많은 기업인들이 자금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칠곡군 보건소, 취약시설 10여개소 감염병 예방 교육

고백건강서포터즈 교육

최근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칠곡군 보건소는 23일 금요일 관내 감염취약시설 10여개소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널리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고백건강서포터즈'가 교육에서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시설에 어르신들에게 직접 교육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이번

교육을 위해 칠곡군 대표 캐릭터 호이와 평화를 활용한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 동영상 자체 제작해 어르신들이 쉽게 감염병 예방법을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에서는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기침예절 실천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받기 등이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고백(GO100) 건강 프로젝트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청도 혈관질환예방 건강강좌

청도군은 26일 건강증진형 풍각보건지소에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를 위한 건강강좌를 운영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를 위한 건강강좌는 지난 19일과 26일 2회차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풍각보건지소 기능보강에 따라 주민참여 프로그램 중 하나로 혈압, 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건강 측정 및 상담과 전문가 강의로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묻고 답하기 등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조여은 기자

의성군, 비만예방 건강교실 종강식

3개월간 주 2회 스포츠 활동

의성군은 지난 22일 의성군 청소년센터 1층 댄스실에서 밸리댄스·아쿠아로빅 교실 참여자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만예방 건강교실 종강식'을 개최했다. 비만예방 건강교실은 5~8월 3개월간 주 2회, 활발한 신체활동으로 비만예방 및 갱년기증상을 완화하고자 「갱년기 극복 밸리댄스 교실」과 55~74세 주민을 대상으로 BMI 25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하여 관정에 무리가 없는 「신바람나는 아쿠아로빅 교실」을 운영했다.

참여 전·후 비교평가를 위하여 기초건강검사, 체성분 측정 등 활용한 신체계측, 체력진단을 실시한 결과 비만 관련 7개 항목(BMI, 체지방률, 허리둘레, 총콜레스테롤, HDL·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중 평균 5개 이상 개선자는 17명(밸리댄스 6, 아쿠아로빅 11)으로 31%를 차지하였으며, 체력진단 결과 사전 '약함'에서 사후 '보통이상' 개선은 밸리댄스 25%, 아쿠아로빅 33.6%를 나타내는 성과

를 거두었다. 또한 갱년기 우울증상 예방을 위하여 우울척도·스트레스 측정 검사를 진행하여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였다.

참여율은 평균 82%(밸리댄스 80%, 아쿠아로빅 83.2%)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날 종강식은 우수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밸리댄스 교실 참여자 공연 시연,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자들의 참여 소감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등 휴거우 시간으로 진행하여 참여자 격려 및 향후 비만예방관리사업 지속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건강교실 참여자 중 김OO씨는 "운동을 통해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져 생활에 활력이 생겼다. 운동시간이 기다려지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주시면 한다"고 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비만은 각종 만성질환을 유발하여 주의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봉화 예천

안동시 매주 금·토요일 저녁 '달빛야시장' 개장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일환 한우 소재 특화 레시피 등

안동시는 30일 용상공설시장에 '달빛야시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야시장은 8월 30일 오후 6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10월 26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 저녁 7-10시에 운영된다.

이번 달빛야시장은 용상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사업공모에 선정되며 2024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접목해 용상시장을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만들기 위해 야시장에 준비한 사업이다.

용상지역의 대표 식재료인 한우를 소재로 개발한 특화 레시피 메뉴와, 한층 업그레이드해 새롭게 만들어진 기존 상가의 메뉴를 이번 야

시장에서 선보이고, 다양한 문화공연 및 노래자랑 등으로 야시장의 분위기를 한껏 북돋을 예정이다.

매주 토요일에는 '용상 행복야시장 놀장'을 운영해 가족 룰렛 게임, 무동력 체험 놀이터, 버블 체험장 등 가족이 함께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마련했다.

우병수 용상시장 상인회장은 "용상공설시장에서 처음 열리는 야시장인 만큼 특색있는 먹거리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라며 "많은 고객이 야시장에 방문해 좋은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관기장 안동시장은 "주말 야시장 운영을 통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즐기시길 바라며, 용상시장이 안동의 대표 야간관광명소로 발돋움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송영주 기자



김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김천시는 지난 22일 개학을 맞아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 밀집 지역 주변으로 유해환경 민간합동 점검에 나섰다. 이날 활동에는 김천시청, 김천경찰서, 김천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4개기관 11명이 참여하였으며, 신음동 일대 음식점, 편의점 등 50여 개소를 방문해 청소년 술, 담배 판매금지 홍보물을 전달하며, 청소년 보호 및 탈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날은 19세 미만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를 집중 단속해 스티커 미부착 업소 7곳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이경호 기자



예천 임신부 교실 수강생 모집

예천군보건소는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임신부와 예비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한 임신부 교실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행복한 임신부 교실은 임신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호명읍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주 2회씩 총 4회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임신부 원예프로그램(꽃바구니 만들기), 임신부 스트레칭, 출산 축하 용품 만들기, 영유아 이차교·전신 예방 교육, 목재 문화체험(도마 만들기) 등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송영주 기자



봉화 읍지연습 자체 강평보고회

봉화군은 지난 22일 전지 종합상황실에서 19일부터 4일간 실시한 읍지연습 실시결과에 대해 자체 강평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읍지연습은 봉화군, 봉화군의회,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비상소집훈련, 정부기관 소산훈련, 전지 현안 과제 토의, 도상연습, 실제훈련을 통해 국가비상사태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위기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성기 기자



문경시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성황리 종료

안전요원 상시 배치 운영 32일간 3100여명 다녀가

문경시는 올 여름 개장했던 문경시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를 지난 25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어린이물놀이터는 정글조형놀이대, 워터슬라이드 버켓워터플레이, 워터건 등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형 물놀이터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휴게 공간과 간이탈의실 등을 갖추고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물놀이터는 7월 25일 개장해 32일간 3,100여명

의이용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시민들과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원생들의 단체 이용객들의 높은 만족도로 문경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마지막 날 문경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원캠페인을 펼쳐 아이들도 함께 구호를 외치며 힘을 보탰다.

송희영 여성청소년과장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물놀이터에서 웃고 즐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가까운 곳에 물놀이터가 있으니 많은 가족들이 방문해 어린이물놀이터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운영결과를 토대로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내년에도 더 많은 사람이 물놀이터를 찾아 아이들과 함께 힐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전국 워크숍 개최

공간재구조화 계획 수립 모색 민간영역 전문가 적극 활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예정지로서 선정된 16개 지자체 및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간재구조화 계획 수립 및 컨설팅'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

보지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방안과 컨설팅을 통한 사업 지원 방안,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상주시는 지난 7월 1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에 선정(전국 16개소)된 후 집중 지원 지자체에도 포함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집중 컨설팅은 지역특성과 시장여건에 맞는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민

간영역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도시계획 사항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 건축, 설계, 시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주시가 추진 중인 도심기능 회복을 통한 콤팩트시티 조성상주시청, 상주문화회관, 상화학교 등 공공시설 이전 후적지의 국·공유지 개발계획은 지방소멸시대 모범적 대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 지원계획을 마련 중이다.

상주시는 선제적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도심기능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상권 및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를 도와주신 관내 단체 회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봉열 풍기읍장은 "지역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해 주신 풍기읍 주민자치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풍기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복지와 자치활동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지난 2008년 발족하여 주민을 위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2동과 강릉시 교동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상호 교류로 주민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성기 기자

안동 농산물가공센터 HACCP 인증

안동시 농산물가공센터가 지난 5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이후 시제품개발 및 식품품목제조보고 18건 등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안전관리인증인 HACCP을 취득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가공제품을 생산하게 됐다.

이번에 취득한 HACCP 인증 제품은 과채주스와 혼합음료 2개 유형으로, 인증 유효기간은 2024년 8월 21일부터 2027년 8월 20일까지 3년이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취득한 2개 유형 외 향후 개발돼 제품화되는 다른 식품 유형에 대해서도 HACCP 인증과 스마트 HACCP 인증을 취득해,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높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영주 기자

경북도청 공영자전거 일시중단

예천군이 '스마트 전기자전거'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로 진행 중인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공영자전거를 철수하고 신규 공영 e자전거 도입을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약 일주일간 공영자전거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교체, 시스템 전면 개편 등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영자전거는 경북도청신도시 스마트도시 서비스 1단계로 2017년에 도입돼 운영해 왔으며 프레임 균열 등 노후화와 신도시 2단계 확장에 따라 스마트 전기자전거로 일괄 교체하고, 기존 공영자전거는 상태에 따라 폐기·관리전환·보존·양여할 계획이다.

새로 도입될 스마트 전기자전거의 정식 명칭은 '경북도청신도시 공영e자전거'다. PAS(Pedal Assist System)방식으로 스스로 틀이 있는 이륜차가 아닌 페달을 밟아야만 갈 수 있고 전기는 동력만 보조해주는 시스템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 사업을 통해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추진에 미비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영주 기자

Opinion

신문 및 이 달 라 지 면 신 문 내 용 도 달 라 지 야 합 니 다 대구 광역 일 보 는 독 자 의 개 습 까 지 다



대구광역시일보 www.dgy.co.kr 등록번호(열간) 대구가 00016 dgynews@daum.net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대구시 중구 태평로286(2층)

발행인 김 영 속 편집인 김 성 중 부 사 장 조 여 은 편집국장 김 현 석

지역번호 053 대표 257-0000 부사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경영지원 267-5000 광고국 267-0800 사회부 253-0060 정경부 253-0061 문체부 253-0065 지방부 253-0064 편집부 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칼럼

학교 등록금 완전 자율화, 화급하다

박 병 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나라 경제의 장래가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에너지, 신소재 등 첨단 미래 산업의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가장 철벽 규제라는 수도권 규제까지 풀어서 첨단학과와 경우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도 학과 신설, 증원을 허용하기에 이르렀겠는가?

학생 정원을 늘릴 때 요구되는 교사, 교직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조건도 교원만 남겼고 교원의 1/3을 전임이 아닌 겸임, 초빙 교수로 채워도 된다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했다.

2024년 수도권 첨단기술 학과의 입학 정원 순증은 817명에 그쳤다(비수도권 1012명을 더하면 1829명).

각 대학이 얼마나 신청했는지, 왜 다 허용해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가 없었다.

교원만 확보하면 증원해도 좋다고 했으니 증원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교원 확보 계획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공계 첨단학과와 경우 실험, 실습 시설과 교원 확보에 다른 학과들에 비해 엄청난 비용이 든다. 교수 요원의 경우 다른 나라의 다른 대학들과는 물론 미국, 중국 등의 세계 최대 기업들과도 유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 입장에서 무슨 돈으로 교수와 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았을 수도 있다.

요컨대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은 대입 정

원이 아니라 대학 재정력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대학의 재정 형편은 고사 일보 직전에 있다.

2000년대 들어서 6%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했던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2009년 0.5%로 떨어지고 10, 11년에 1.5, 3.0%로 약간 회복되었지만 2012년 -3.9%로 원점으로 돌아간 후 지금까지 16년간 다 합쳐서 4.2% 오르는 사실상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소비자물가가 39.3% 올랐으니 실질 등록금 수입은 25% 줄어든 셈이다. 게다가 학생 수 감소로 2011년 13.6조원이었던 등록금 수입이 작년에는 11.4조원으로 줄었다.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는 정치인들은 대학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등록금 동결이 계속되고 이를 벌충할 정부의 지원도 없다면 첨단산업 인재 양성은 불가능하다.

법에 의하면 대학 등록금은 직전 3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왜 안 올랐나고 대학에 물어보면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II 타입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고 다른 예산 지원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라고 한다.

올해 법상 인상 한도인 5.64%만 올렸다면 64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더 마련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주먹구구 계산이지만 소비자물가만큼만 매해 올렸어도 올 한 해에 4조원 이상, 법이 허용하는 1.5배를 계속 올렸다면 6조원 이상의 재원을 더 가지고 첨단 학과의 시설과 교

수 확보에 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참고로 올해 타입 II 국가장학금은 3,500억 원이다. 지금이라도 대학은 일치단결하여 국가장학금 예산을 거부하고 등록금 인상의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

대단히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할 줄 안다. 그 사이에 학생 대표가 3/10 이상을 차지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의 의무화되었다.

대부분 대학이 전문가 1명 이외의 위원을 학생과 교직원인 반분하는 구조의 위원회를 설치했고 학생 대표들은 등록금 동결을 소명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이 다 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졸업 후에 전공 분야에서 일할 가능성이 희박한 학생이라면 어떻게든지 등록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는 것이 이익일 수 있다.

전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어 평생 그 분야에 종사할 생각이 학생은 등록금을 좀 더 내서 더 실력 있는 교수도 모시고 실험 실습 장비도 현대화해서 그 학교 출신이라면 세계 일류 회사에서 왔다투어 모시고 갈 정도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싶어 할 것이다.

등록금 결정 단위를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해당 학과의 학생과 교수가 주도적으로 용처를 정하게 하는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내가 더 낸 등록금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쓰인다면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을 주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좌우지간 교육부는 등록금 결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등록금 결정 방법 자체를 자유화해야 한다.

어떤 문제든 모르면 큰 문제가 되어 합의가 어렵고 쪼개서 작은 문제로 만들면 합의가 쉬워진다. 사람 수가 많으면 실질적인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고 선동이 더 쉬워진다.

온 국민이 더 원하는 하나의 결정을 정부가 해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부터 버려야 한다.

김 병 연

시인 · 수필가



칼럼

자식농사(子息農事)

농부는 작물을 가꾸는데 온갖 정성을 다한다. 씨앗과 토양을 가꾸고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십 번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런데 농부는 매일매일 정성을 다할 뿐 조금도 조급해 하거나 서두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작물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도 이런 원리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농부는 1년을 기다리지만 교육은 최소한 16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아이가 언젠가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보살피어야 한다.

생활이 교육이고 교육이 생활이라는 말과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관자는 1년을 생각하면 벼를 심고, 10년을 생각하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생각하면 사람을 심어야 한다고 하였고, 하나를 심어서 열을 얻는 것이 나무이고, 하나를 심어서 백을 얻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였다.

가을에 거두어들일 것이 많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에 쉽 없이 일하며 곡식이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라는지 늘 정성으로 보살피어야 하듯이 자식농사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자식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워선 안 되

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강하게 키워야 된다. 자식에 대해 고기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농사는 금년에 잘못 지었으면 내년엔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하지만, 자식농사(子息農事)는 한번 잘못 지으면 영원히 복구가 어렵다. 자식의 잘못된 부모의 몫으로 남게 되고 죽을 때까지 후회한다.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풍년 든 자식농사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자식농사는 농사 중의 농사이다.

오늘의 정치

쟁쟁법안은 뒤로 미루고 민생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합시다.



국민의힘수석대변인

곽 규 택

오는 28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음 처리합니다. 국민들께 면목이 없지만, 이제라도 협치의 장을 열게 되어 다행입니다. 전세기특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부·장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속속 넘고 있습니다.

내일 법사위를 거치고 나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속내를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생법안과 별개로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재요구한 '13조 현금살포법', '방송장악법', '불법파업 조장법'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합니다.

모처럼 국민 기대에 부응해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과 함께 자신들이 날치기 강행 처리한 쟁점법안을 함께 올리려면, 또 '민생 발목잡기'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할 게 아닙니다. 28일 본회의에서 입법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쟁점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합시다.

논평

경북도의 박정희 동상 건립 강제할당 관계모금 규탄

우상화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박정희

오는 28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음 처리합니다. 국민들께 면목이 없지만, 이제라도 협치의 장을 열게 되어 다행입니다.

전세기특별법을 비롯해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부·장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속속 넘고 있습니다.

내일 법사위를 거치고 나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속내를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생법안과 별개로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재요구한 '13조 현금살포법', '방송장악법', '불법파업 조장법'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합니다. 모처럼 국민 기대에 부응해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과 함께 자신들이 날치기 강행 처리한 쟁점법안을 함께 올리려면, 또 '민생 발목잡기'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할 게 아닙니다.

28일 본회의에서 입법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쟁점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합시다. 그리고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쟁점법안에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도 부족합니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행복한 가정

과격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포항 경산
영덕 청송
영양 올린
올름

등록규제 정비·개선... 新환경변화 능동 대처

포항시 일제정비 추진 8건 심사 개정 사항 미반영 전수조사 실시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포항시는 26일 시청 연오세오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규제소관 부서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장상길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

에서는 포항시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에 따른 정비대상규제 8건에 대한 적정성 심사와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신설규제 2건에 대한 규제등록 여부를 결정했다.

시는 5년 이상 경과한 포항시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상위법 위법범위 일탈 여부, 개정 사항 미반영 등 전수조사를 실시해 규제의 완화, 삭제 및 보완이 필요한 등록규제 8건을 정비 대상으로 확정했다.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

정에 따른 결격사유 및 직권면직에 관한 2건의 신설규제를 심사해 단위 채용에 따른 결격사유규정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을 나열함으로써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무분별한 규제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도입 시점부터 규제영향분석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규제에 등록하고 있다.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 소관부서에서 규제의 존치 여부에 대해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완화·폐지하는 등 선제적·주거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연말까지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포항시 등록규제 157건에 대해 시스템상 입력 오류 및 누락 사항 등을 정비해 시민들의 규제 열람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장상길 위원장은 "등록규제의 주기적 정비와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편의 증진은 물론 행정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산지역아동센터 발표회

경산시가 주최하고 경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주관한 '2024년 경산지역아동센터 예술페스티벌'이 24일 경산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종사자, 가족, 후원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예술페스티벌은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들이 지난 1년간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에서 배운 실력을 발표하고 전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연에는 댄스, 합창, 연주, 음악 줄넘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으며, 공연장 입구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작품이 전시돼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영덕군, 역량 강화 초청 특강

영덕군은 성숙한 지방자치체를 이룩하고 내부 역량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의 우동기 위원장을 초청해 지난 21일 영덕로하스수산물지원센터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엔 직원 18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소개됐다.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위원회의 노력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영양군다문화가족, 도예 체험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4일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초등기 초학습지원(다배움) 사업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30여 명을 대상으로 '손끝에서 피어나는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도자기공예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아이들은 각자 도자기 위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하며 나만의 특별한 도자기 작품을 만들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지고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권윤동 기자



울릉군, 노후 상수도 정비 예산 확보

울릉군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관련된 예산 118억원을 확보, 노후 정수장을 재건설하는 공사에 착수해 우수율 제고는 물론 상당량의 예산절감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노후 상수도 정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남양정수장은 1982년 가동되면서 시설 노후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데다 시설 개량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4년부터 5년간 118억 원을 투입해 남양정수장을 전면 재건설(Q=500m³/일)해 늘어나는 급수 수요량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정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훈환 기자

경산 청년들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인재 육성도시로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사업 해단식 관내 10개 대학 추천 학생들 파견 8박 10일 일정 외국서 문화 교류

경산시는 23일 영남대학교 이시원 글로벌 컨벤션홀에서 '2024년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사업'에 참여한 대학생 해외 자원봉사대 30명을 대상으로 성과 공유 및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외 자원봉사자 인증서 수여식, 우수 활동 대원 시상, 봉사대 대표 학생의 활동 후기 발표 등이 진행됐다. 또한, 참가 학생들이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공유

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베트남 해외 봉사는 8박 10일 일정으로 호치민시와 달랏시에서 진행됐다. 봉사대는 호치민시에서 대영전자, 경북 호치민 대표사무소 등 현지에 진출한 기업과 기관을 방문하고, 유학생을 준비 중인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 시간을 가졌다. 달랏시에서는 달랏국립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과 함께 교내 환경 정화나 나무 심기,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했으며, 미얀마 특수학교에서 교육 봉사와 노후 시설물 정비, 커피 농장 농부 쉼터 환경 개선 활동도 펼쳤다.

영남대학교 김관현 대표 학생은 후기 발표에서 "경산시와 지역 대학 대표로서 유학생 유치에 기

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경험이 앞으로 사회에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경산시장은 "서로 다른 대학의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친 것을 보고 감동했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경산 청년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고, 경산이 글로벌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도시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년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사업'은 영남대학교가 주관하며 올해로 2회째 진행된다. 관내 10개 대학에서 추천받은 학생들을 선발해 파견하며,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지역 공동체와 공공의교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해외로 파견된다.

제3회 청송군수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관내 약 300여명 선수 참가 파크골프 동호인 저변 확대

청송군은 23일 청송군파크골프장에서 '제3회 청송군수배 파크골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송군파크골프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청송군, 청송군의회, 청송군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저변확대와 체육대회를 통한 군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대회는 시니어부와 읍·면 단체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청송군 관내 약 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또한 경기 중에는 경품



추첨 등의 이벤트가 마련돼 선수들의 사기도 북돋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 시설 조성, 각종 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울진군의료원, 인공지능 방역로봇 도입

자율 주행·자동충전 기술 적용

울진군의료원은 각종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방역로봇을 도입했다. 인공지능(AI) 방역로봇은 카메라 센서 기반의 안전한 자율 주행, 자동충전 등의 기술을 적용해 로봇이 스스로 울진군의료원 외래진 구역을 대상으로 이동하며 방역하게 된다.

기존의 소독액을 분사하던 살균시스템과 달리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바이러스를 99.9% 이상 살균하는 친환경 플라즈마방식을 탑재해 사람이 있

는 공간에서도 24시간 방역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하단에 탑재된 UVCLED를 통해 비말 등으로 바닥에 낙하된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동시에 방역하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생활유해가스 등에 대한 공기 청정 기능도 제공한다.

울진군의료원은 코로나19, 마이크로플라즈마 등 각종 호흡기질환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환자 김00은 "요즘같이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환자 안전을 위해 신경을 써주시는 울진군의료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울진군의료원, 인공지능 방역로봇 도입

자율 주행·자동충전 기술 적용

청송군은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군립 청송야생미술관에서 지역작가 초대전 '솔부엉이'의 형상을 묘사한 등불 등 다양한 작품이 있다.

특히 작품에 투영되는 부엉이는 재물, 지혜, 행운의 의미를 가진 동물로서 근심을 떨쳐내고 행운이 함께 하길 바라는 김선교 도예가의 염원이 담겨 있다.

청송의 한티골짜기에서 작품 활동을 한 김선희 도예가는 자연과 일체화된 삶을 자신만의 절제된 시각 언어로 단순화해 표현하였으며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온 청송에서의 삶을 작품에 담아 내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김선희 도예가의 작품을 통해 주왕산에 응거하는 솔부엉이의 힘찬 날갯짓을 느끼시길 바라며,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이 지친 심신에 휴식을 취하시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